



주간통일정세 2012-21(2012.05.14 ~ 05.2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2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일성·김정일주의가 北 새 지도사상(5/16, 신화통신;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노동당의 새 지도사상으로 정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인용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달 6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는 제목의 담화에서 노동당 지도사상을 기존 김일성 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기존의 김일성 주의 혁명사상을 발전시키고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었으나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명칭으로 지도사상 변경을 거부해왔다고 소개하고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으며 아울러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김일성 주의 혁명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혁명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함.

- **김정은 '국토관리' 노작 이후 北전역 공사장(5/20,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노동당, 경제기관, 근로단체 간부들과 담화를 하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벌이라"고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최영림 내각총리,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기남, 문경덕 노동당 비서, 로두철 내각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를 열었음.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평양시에서는 요즘 도로주변과 녹지에 잔디와 여러 종류의 지피식물을 심고 가꾸는 데 힘을 넣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으며 17일에는 "평양시를 원림녹화가 잘된 공원 속의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한 시민의 열의가 대단히 높다"며 "시 중심부에 멋있는 주택구획이 생겨나고 녹지 조성과 나무심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함.

- **김정은, 인민군 연합부대 공연 관람(5/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639대연합부대와 53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김 1위원장은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 "해당 부대들의 정치부가 자기 역할



을 잘하고 있다"며 "(인민군) 예술선전대는 축전에 참가해 평가를 받는 것보다 군인들을 교양하는 데서 긍지와 보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함.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위원장 저작(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발표 24돌 즈음 '김정은 두리에 일심단결, 김정일애국주의 기치높이 강성국가 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가자'고 독려(5.15,중통·노동신문 /열렬한 애국충정은 영웅적 위훈의 원동력)
- 최영림 내각총리, 5.15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요해(5.15,중통)
- 최룡해 총정치국장, 5.15 평양민속공원 건설정형 현지요해(5.15,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5.17 평안북도 창성군 사업(창성식료공장, 식주식물공장 등) 현지요해(5.18,중통)
- 최영림, 5.18 릉라인민유원지 개발사업도 현지요해(5.18,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이탈리아 주재 北 대사로 '김춘국' 임명(5.18,중통)
-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이며 위대한 혁명사상'이라며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따라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어나갈 것'을 선동(5.20,평방/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
- 최영림(내각총리), 5.20 평양남새과학연구소·평양화초연구소 온실 건설실태 및 평양민속공원 현지 요해(5.20,중통))

■ 김정은동향

- 5/20,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제639·53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5.20,중통·중·평방)
· 최룡해·장성택·현철해·김경옥·황병서·권혁봉·손철주·박재경·조경철등동행 관람
- 5/20 김정은, 만수대지구 건설 지원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20,중방)

나. 경제

● 中 장백현 출발 北변경관광 3년 만에 재개(5/14, 길림신문)

- 중국-북한 접경인 지린(吉林)성 장백(長白)조선족자치현을 출발해 북한 양강도 혜산시 일대를 둘러보는 변경관광이 이달 초 재개됐다고 길림신문이 14일 보도함.
- 장백현을 출발하는 북한 변경관광은 1~3일짜리 상품이 있으며 비용은 1인당 630 위안(약 11만5천 원)~1천280 위안(약 23만3천 원)이며 주요 관광코스는 혜산시 보천보전투 유적지, 삼지연 풍경구, 백두산 밀영, 김



정숙사범대학, 백두산 천지, 해산시 소년궁 등임.

- **상하이~평양 전세기 7월부터 운항(5/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하얼빈~평양 노선에 이어 상하이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전세기가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관광총국 문대길 부총국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난징 등 중국 동부 주요 도시를 순방하면서 상하이~평양 직항 전세기 투입과 여행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고 중국 민항망이 전함.
 - 문 부총국장은 여행 성수기인 7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두 차례 중국인 여행객을 위한 전세기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하얼빈~평양 직항 전세기는 4월27일부터 주 2회 운영에 들어감.

- **北나진항, 중국산 석탄운송 전용항만?(5/16,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들어 4월까지 중국 지린성 훈춘 일대에서 생산돼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 남동부로 운송된 석탄의 양이 10만 여t으로 지난해 전체 반출량 10만t을 이미 넘어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훈춘시는 최근 자체 인터넷에 올린 정무공포 자료에서 나진항을 통한 훈춘산 석탄의 운송을 '차항출해(借港出海,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공개했다고 방송은 전함.
 - 훈춘시는 나진항을 통해 훈춘산 석탄을 상하이, 닝보 등 중국 남동부 지역으로 해상운송하는 방식이 이미 일반화했다고 밝혀 지난해 나진항을 이용해 시험적으로 시작한 석탄 남방운송이 본격도에 올랐음을 시사함.
 - 훈춘시는 작년 1월11일 훈춘산 석탄 1만7천t을 나진항에서 상하이로 운송한 뒤 연말까지 총 50만t의 석탄을 실어낼 계획이었지만 원정리~나진항 구간 도로공사 탓에 실제 운송량은 목표의 5분의 1 수준인 10만t에 그침.

- **1~4월 남북교역액 전년比 18% 증가(5/16, 연합뉴스)**
 - 남북관계 경색에도 올해 1~4월 남북교역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합뉴스가 전함.
 -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남북교역 총액은 6억277만2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1천144만7천 달러에 비해 17.9%인 9천132만5천 달러 증가함.
 - 이 기간 북한으로 반출한 금액은 1만3천895건, 2억6천881만8천 달러이며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금액은 1만1천432건, 3억3천395만4천 달러인데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이 모두 중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교역액은 대부분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액인 것으로 보임.
 - 4월까지 남북교역을 품목별로 보면 반출 품목은 주로 의류 생산용 원부



자재와 생산설비 등이며 반입 품목은 여성의류 등 가공된 완제품임.

● **北, 금지 사치품 수입 계속(5/16, 연합뉴스)**

- 북한은 유엔이 정한 금지 사치품을 중국의 중개상을 통해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소위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1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유엔 소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수입되는 금지 사치품의 상당 부분이 일본산인데 중국 다롄(大連)의 무역회사 DGUSA가 주요 중개 통로가 되고 있으며 북한으로 수입된 일본산 금지 사치품들은 1만 개비의 담배와 12병의 정종, 20만엔 상당의 화장품, 수백대의 노트북 컴퓨터 등이며 중고 벤츠 3대도 중국의 중개상을 통하지 않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소식통은 전함.
- 이들 제품의 거래를 맡은 북한측은 농라도무역, 신평무역, 상명2 등이며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일본의 소기업과 재일 북한 교포 등은 돈세탁에 관련됐다고 소식통은 밝힘.

● **中엔지-北금강산 직항 관광코스 내달 개통(5/18, 연변일보)**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엔지(延吉)에서 북한 금강산을 오가는 직항 관광코스가 다음 달 개통될 예정이라고 연변일보가 18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 금강산 관광 총대리권을 가진 연변천우국제여행사는 다음 달 중순 엔지-금강산 관광을 시작할 계획임.
- 관광단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엔지를 출발하며 3박4일과 4박5일짜리 2개 코스가 있음.
- 관광비는 4박5일 기준으로 1인당 4천500 위안(83만4천 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문은 지난 4월 14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었다가 일정이 미뤄진 금강산 유람선 관광도 이번 직항 코스와 함께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합영투자위 과장 김일순, 5.14 평양고려호텔에서 외국 투자설명회를 통해 '법률적 토대와 경제적 환경(자원, 인력, 각종 세금과 세율 등)' 등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5.17,중통·노동신문/성공적인 투자 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다)

다. 군사

● **北, 무수단리 발사장 개선 공사 진행(5/16, 교도통신)**

-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에서 개선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16일(현



지시간) 보도함.

- 한 외교 소식통은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이뤄지는 공사가 아직은 초기 단계에서 어떤 공사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설치 공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北 올해 아리랑공연 8월1일 개막(5/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대집단체조 '아리랑공연'이 올해는 8월1일 개막해 5주간 열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내 북한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를 인용해 15일 보도함.
 - 고려여행사는 14일 온라인 소식지를 통해 "북한 당국이 올해 아리랑공연 일정을 8월1일부터 9월9일까지로 공식 확정(officially confirmed)했다"고 밝히고 공연은 90분간 진행되고 매주 5차례 열린다고 전함.
- **국제적십자, 북한에 270만 그루 묘목 심어(5/16,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IFRC)가 지난 3월부터 두달 동안 북한 평안남북도 등 30여 곳의 산간 지역에 270만여 그루의 묘목을 심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북한 내 홍수 취약지역에 심은 나무의 수종은 아카시, 잣나무, 소나무, 미루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등으로, 2만여 명의 북한 농민, 자원봉사자들이 묘목 심기에 동원됨.
 - IFRC 베이징사무소는 북한 국가과학원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올해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산간과 나무를 이용하는 '산림 농업'에 대한 특별연수를 관련자들에게 제공함.
- **북한 기대수명 70세, 세계 107위(5/16, 미국의소리(VOA))**
 - 세계보건기구(WHO)가 16일 발표한 '2012 세계보건통계'에서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을 평균 70세로 추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전함.
 - 이 같은 기대수명은 세계 194개국 중 107번째에 해당하며 성별로는 북한 여성이 평균 72세로 115위, 남성은 67세로 104위였음.
 - WHO는 2010년 현재 북한의 총인구를 2천434만6천 명으로, 중간나이를 33세로 추정했으며 북한 인구 중 15세 미만 어린이는 23%, 60세 이상 노인은 14%로 추산함.
- **北 런던올림픽에 11개 종목 출전(5/17, 조선신보)**
 - 북한이 올여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30차 하계올림픽에서 11개 종목에 출전하게 됐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7일 전함.
 -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종목은 여자축구, 탁구(단체, 남녀), 유도(여), 레슬링(남녀), 권투(남), 활쏘기(여), 사격(여), 마라톤(남녀), 수중체조



무용(여자 2인조), 다이빙(남녀) 등이며 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 중에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은 안금애(여자 유도 52kg급) 선수, 김금옥(마라톤) 선수 등이 포함됨.

● **스포츠용품사, 런던올림픽 北선수단 후원(5/18,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여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30차 하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이탈리아 스포츠용품사의 후원을 받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함.
-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북한 축구팀을 후원한 이탈리아 스포츠용품회사 LEGEA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북한 선수단을 후원하며 이에 따라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전원은 LEGEA 상표가 찍힌 운동복을 입게 됨.

● **北인구 26%만 가정서 전력 혜택(5/18, 미국의소리(VOA))**

- 북한 전체 인구 중 26%만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발표된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를 인용해 18일 전함.
- UNDP의 '2012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북한의 전력사정은 20개 아시아 국가 중 5번째로 열악한 수준이며 북한의 1인당 전력 사용량도 1990년 이래 감소해 1990년 북한 주민 1명이 단위 시간당 사용한 전력량은 1천246kWh 였지만 2000년에는 713kWh로 급감했고 2008년에도 809kWh에 불과함.

● **日 학자 '백두산 20년 내 분화 확률 99%'(5/19, 교도통신)**

-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백두산이 20년 안에 분화할 확률이 99%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함.
- 다니구치 히로미쓰(谷口宏充) 도호쿠대 명예교수(화산학)는 최근 백두산이 동일본대지진(규모 9.0) 판(플레이트) 운동의 영향으로 분화할 확률이 2019년까지 68%, 2032년까지 99%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음.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15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5.14~17), 5.14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5.14, 중통·중방)
 - 강석주(내각부총리), 리룡남(무역상), 오룡철(무역성 부상), 김성덕(평양시 인민위 부위원장), 김문정(北 국제전람회 사장/개막연설), 여러 나라 지역 대표단들 등 참가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산림법' 일부내용 수정보충(5.17, 중통)
 -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 하기 위한 사업이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현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1조 수정 보충



2. 대외정세

가. 일반

- 원자바오 "북한에 주민생활 우선 설득 중"(5/14, 요미우리신문)
 -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 회의에서 "북한에 주민의 생활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온라인판이 보도함.
 - 신문은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 원 총리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에게 북한 새 지도자 김정은 제1비서의 체제가 출범한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이 '올바른 판단'하도록 유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함.
- 北 김영남, 印尼 영웅묘지 헌화(5/14, 연합뉴스)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친선방문 이틀째인 14일 자카르타 국립 영웅묘지를 방문해 헌화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김 위원장이 13~16일 유도요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친선방문한다며 리광근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안정수 경공업상 등이 수행한다고 전함.
- 北 송일호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했다"(5/15, 도쿄신문)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일본인 납치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15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송 대사는 지난달 16일 북한을 방문한 '북한 여성과 연대하는 일본 부인연락회'의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대표(전 참의원 의원)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를 이미 실시해 약속을 이행했지만 일본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말함.
- 北 김정은, 유도요노 印尼 대통령 초청(종합)(5/15,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1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마르티 나탈레가와 외무장관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유도요노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간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초청장을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함.
 - 나탈레가와 장관은 두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의 오랜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 상호 문제와 함께 지역적, 세계적 문제들도 논의했다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이 지난달 시도한 위성발사 등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남북 관계, 통일문제 등을 설명했으며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에 남북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함.



- **美하원, '북한인권법' 5년연장안 가결(1보)(5/16,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함.

- **北 軍추정 선박, 中어선 나포(종합)(5/17, 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 중인 중국 어선 3척은 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나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17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 가운데 한 척인 랴오단(遼丹) 23528호와 함께 작업하다 도주한 랴오단 23527호 선장 장중귀(姜中國)는 소형 북한 군 선박이 랴오단 23528호에 빠르게 다가가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당시 북한 선박에는 푸른색 제복을 입은 사람 4~5명이 타고 있었음.
 - 다른 나포 어선인 랴오단 23979호도 공용 통신망을 통해 "북한군 배에 잡혔다"고 말했다고 주변 해역의 중국 선장들은 증언했으며 억류 어민들은 중국의 선주와 통화를 할 때 제복을 입은 총을 지닌 사람들과 사복차림의 사람이 섞여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중국어를 하는 사람도 섞여 있다고 전함.
 - 랴오닝성 공안변방총대는 "현재 (북한과)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만 밝히며 자세한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음.

- **北·日, 中서 '일본인 유골 반환' 논의(5/17, 산케이신문)**
 - 북한과 일본이 평양에서 발견된 일본인 유골을 반환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17일 보도함.
 - 민주당의 나카이 히로시(中井浩) 중의원 예산위원장과 가까운 관계자가 이날 중국 동북부를 방문해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와 만날 예정임.

- **유엔, 北-시리아·미얀마 무기거래의혹 조사(5/1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對)북한 제재위원회가 북한과 시리아 및 미얀마 간 무기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함.
 - 이같은 사실은 로이터가 17일(현지시간) 단독 입수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드러났으며 전문가 패널은 이번 주초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지적함.

- **日, 北에 일본인 납치문제 실무협의 요청(5/19, 교도통신)**
 - 일본 정부관계자가 북측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즉답을 받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복수의 북일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과 가까운 한 정부관계자는 15~17일 방북한 도쿄도 시부야구 지방의원을 통해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 황호남 국장에게 실무협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함.

● G8정상 "北, 도발 계속시 더심한 고립 직면"(5/19, 연합뉴스)

- 미국을 비롯한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걸을 경우 더 심한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연합뉴스가 전함.
- G8 정상들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시작된 정상 회담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미 당국자가 전함.

● 북한, 나포 中어선·어민 전원 석방(5/20,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지난 8일 나포한 중국 어선 3척과 어민 29명 모두를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장야셴 참사는 이날 신화통신에 북한 외무성이 이 같은 내용을 중국대사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 풀려난 중국 어선과 어민들은 귀로에 올랐다고 장 참사는 말했으며, 류홍차이(劉洪才) 대사를 비롯한 평양의 중국대사관원들은 북한을 상대로 한 교섭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중국 어선과 어민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5.14 인도네시아 '민족영웅묘에 화환' 진정 및 '민족기념비' 참관(5.14, 중통·중방)
-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5.15), 일본의 '미국인 北 납치설'(데이비드 스넬던/ 2004년 중국에서 실종) 주장은 '완전 거짓, 터무니없는 또 하나의 모략책동'이라고 비난(5.15, 중통)

3. 대남정세

● 北 '광우병 촛불' 다시 지피려 인간힘(5/14,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누구를 위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인가'란 제목의 글을 싣고 "남조선에서 미친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반정부 투쟁으로 타 번지는 것은 응당하다"고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이명박 패당의 용납 못할 역적행위로 하여 남조선에는 지금도 미친소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고기가 아무런 제한 받음이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이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험이 조성됐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北, GPS 전파교란 북한 소행설은 모략·날조(5/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14일까지 16일간 우리측 영공과 해상에서 감지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전파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며 우리 정부의 '모략·날조극'이라고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함.
 - 북한 체신성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이명박 쥐XX패당이 동족대결의 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최근에는 제놈들이 당한 전파교란 피해를 놓고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드는 새로운 모략극, 날조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역적패당은 (교란전파가) 개성에서 내려오는 교란신호가 분명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최근에 반입한 차량형 GPS 장애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느니, 요즘에는 이명박 역도의 위축을 받은 중국의 작용으로 드디어 우리가 전파교란을 중지했다느니 하면서 안팎으로 날조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北 인권문제' 관련 '공화국의 권위를 허물어 보려고 날뛰는 것, 특별행동 통고에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저승길을 재촉하는 자살행위'라고 재차 위협(5.14,평방/피를 말려 죽일 것이다)
 - 李 대통령의 해외언론과의 서면인터뷰시 對北발언(자유와 인권, 경제상황, 독재정권, 폐쇄국가 등) 관련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황당무계한 날조로 일관된 악담질을 했다'며 '보복성전의 불벼락' 등 재차 위협(5.17,우리민족끼리/대결쓸라닥질과 악담질은 청와대취박이의 본성/해외에 나가서도 대결쓸라닥질, 민화협 강금철 투고)
 -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 통일항아리, 통일비용' 등 거론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노숙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 및 現남북관계 책임전가(5.19,평방/북남관계를 결단난 자들의 노숙)
 - 美 광우병을 발생 관련 '北, 反정부 촛불시위선동 개시' 등의 기사를 쓴 언론매체(연합뉴스, 동아·문화일보 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대결과 왜곡으로 일관하는 보수언론은 쥐무리패당의 대결용 도구일 뿐이다'고 비난(5.20,우리민족끼리/쥐무리패당의 대결용 도구)
 - 조총련, 5.19 총련 중앙위 제22기 제3차 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허종만' 책임부의장을 '의장'으로 선출(5.19,조선신보)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핵실험 탐지 장치 日 아오모리에 배치(5/16)

- 북한 핵실험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일본 아오모리현 무쓰시의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시설 안에 배치됐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음. 이 장치는 핵실험 시 대기 중에 유출되는 방사성 제논을 검출함. 제논은 지하 핵실험을 하더라도 대기 중으로 새어나옴. 이밖에 지진 파와 수증음파, 기압 진동 등의 자료를 종합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는지를 판단함.
- 이 이동식 장치는 미국 국립기관 소유로 앞으로 6개월간 아오모리에 배치됐다가 다른 나라로 옮겨짐. 장치 담당자인 오다 데쓰조(小田哲三)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기술 주석은 이 장치의 정확도에 대해 "풍향이 문제가 되겠지만, (아오모리는) 북한과 가까운 만큼 (핵실험을) 탐지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음.
- 제논 관측장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근거해 한국 등 세계 40곳에 배치돼있음. 일본에는 군마현 다카사키(高崎)시에 이어 아오모리현에 두 번째로 배치됐음.
-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 한차례씩 핵실험을 했음. 2006년 1차 실험은 한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탐지했지만, 2009년 2차 실험은 어느 나라에서도 탐지하지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美 한미연구소 "北 영변 경수로 건설 진척"(종합)(5/17)

- 북한이 한동안 중단했던 영변 핵시설내 경수로 건설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를 인용해 보도했음. 한미연구소는 4월30일자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에 있는 경수로 격납건물의 건설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음.
- 연구소는 '진척'의 내용과 관련, 경수로 격납건물의 실린더형 부분(지붕)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추가돼 있어 과거 위성사진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높이가 올라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변의 경수로가 오는 2014년 또는 2015년 전에 가동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했음.
- 한미연구소는 지난해 새로운 경수로 건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초까지 중단됐으나, 지난 3월말부터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건설이 한동안 중단된 이유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겨울철의 추



- 운 날씨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연구소는 지적했음.
- 이와 관련, 북한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는 지난 3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영변에 건설 중인 경수로의 규모는 10만KW급이라며 "올 연말까지 완공해 즉시 가동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리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 전력공급 개선은 중요한 내정과제라면서 영변 경수로가 바로 전력공급용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에게 영변 핵시설내에 원심분리기 1천여개를 갖춘 첨단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음을 공개했음. 한미연구소는 '경수로 건설의 진척'에 대해 북한이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음.

● **한미일 6자대표, 21일 서울서 북핵협의를(5/18)**

- 한국,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오는 21일 서울에서 3자협의를 갖고 한반도 현안을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밝혔음. 이번 협의에는 한국측에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측에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측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임.
-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회의는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한 3국간 협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 및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국무부에 따르면 데이비스 대표는 오는 20일 서울에 도착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임 본부장 등 한국측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뒤 다음날 열리는 한·미·일 3자협의를 참석할 예정임. 이어 오는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등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또 오는 23일 도쿄(東京)로 이동,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 등과 만나 양국간 현안을 협의한 뒤 25일 귀국할 예정임.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3자협의를 지난 1월 1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4개월만임.

나. 미·북 관계

● **美하원, '북한인권법' 5년연장안 가결(1보)(5/16)**

-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음.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음.



-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이날 다시 재연장됐음.

다. 중·북 관계

● 中 장백현 출발 北변경관광 3년 만에 재개(5/14)

- 중국-북한 접경인 지린(吉林)성 장백(長白)조선족자치현을 출발해 북한 양강도 혜산시 일대를 둘러보는 변경관광이 이달 초 재개됐다고 길림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신문은 이 관광코스가 당초 2009년 개통됐으나 관광객이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비자(통행증)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 여러 원인으로 지난 3년간 중단됐다고 전했다. 장백현 당국은 북한 측과 협상을 벌여 관광코스 운영을 위한 국가공안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최근 중국 장백여행사와 북한 백두산여행사가 변경관광 협약을 체결했음.
- 장백현을 출발하는 북한 변경관광은 1~3일짜리 상품이 있으며 비용은 1인당 630 위안(약 11만5천 원)~1천280 위안(약 23만3천 원)임. 주요 관광코스는 혜산시 보천보전투 유적지, 삼지연 풍경구, 백두산 밀영, 김정숙사범대학, 백두산 천지, 혜산시 소년궁 등임.
- 신문은 이번 북한 변경관광 재개로 장백현의 대북 변경무역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음.
- 장백현에 기반을 둔 장백경제개발구 변경무역 수출입총회사는 지난해 7월 압록강 너머 북한 양강도 김정숙군에 있는 대규모 석영 광산을 북한의 조선신진회사와 공동개발하는 협약을 체결, 이 광산에서 채굴한 석영을 중국으로 들여오고 있음. 장백현은 북한에서 채굴된 석영 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북한 접경인 십삼도구에 임시 통상구를 개설했으며 북한 자원 개발 확대에 따라 통상구 규모를 점차 키워나갈 계획임.

● 원자바오 "북한에 주민생활 우선 설득 중"〈日紙〉(5/14)

-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 회의에서 "북한에 주민의 생활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온라인판이 보도했음.
- 신문은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 원 총리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에게 북한 새 지도자 김정은 제1비서의 체제가 출범한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이 '올바른 판단'하도록 유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했다. 이어 원 총리는 북한 측에는 "경제발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신문은 소개했음.
- 원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북한에 핵실험 등을 자제하라고 손을 쓰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음.
- 중국은 4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전에도 "민생 발전에 집중하라"며 북한 측에 발사 자제를 구했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작년 12월 급사한 김정일 총비서의 '유훈'이었지만 북한이 동북부 풍계리에서 준비를 마친 것



으로 알려진 핵실험의 강행은 김정은의 최종판단에 달린 것으로 한국 정부는 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원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주민 민생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 **상하이~평양 전세기 7월부터 운항(5/15)**

- 중국 하얼빈~평양 노선에 이어 상하이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전세기가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음. 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관광총국 문대길 부총국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난징 등 중국 동부 주요 도시를 순방하면서 상하이~평양 직항 전세기 투입과 여행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고 중국 민항망이 전했다.
- 문 부총국장은 여행 성수기인 7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두 차례 중국인 여행객을 위한 전세기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얼빈~평양 직항 전세기는 4월27일부터 주 2회 운영에 들어갔음. 그는 또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동부지역 주민들이 베이징에 가지 않고 상하이에서 직접 비자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음.
- 북한 당국은 이와 별도로 이미 해외사무소가 개설된 중국, 말레이시아, 독일 외에 다른 나라에도 북한관광객을 모집하는 해외사무소를 추가개설할 계획이라고 중국내 조선국제여행사가 밝혔다.

● **中 어선 3척, 북한에 나포(5/16)**

- 중국 어선 3척이 서해에서 북한에 나포됐다고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음. 중국 어선들이 서해 한국 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 해경에 나포되는 경우는 잦지만 북한에 나포된 것은 매우 이례적임.
-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 선적의 '랴오단(遼丹)23979호'가 지난 8일 새벽 4시30분께 동경 123도57분, 북위 38도05분 해역에서 조업하다 정체불명의 북한 선박에 나포됐음. 이어 '랴오단(遼丹)23528호'와 '랴오단(遼丹)23536호'가 잇따라 같은 북한 선박에 나포됐음. 중국 어선을 나포한 북한 선박의 소속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은 해당 해역이 '중국의 해역'이라고 전했음. 세 척의 어선에 탄 중국 어민은 모두 29명임. 북한에 억류된 한 중국 선원은 나포 다음 날인 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인이 제공한 위성전화로 본국에 전화를 걸어 한 척당 40만 위안(약 7천380만원), 총 120만 위안(약 2억2천만 원)을 송금해야 풀려날 수 있다고 전했음.
- 중국 외교부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해당 어선이 불법한 것은 어업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은 현재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면서 조선(북한)과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에 타당한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나진항, 중국산 석탄운송 전용항만?(5/16)

- 올해 들어 4월까지 중국 지린성 훈춘 일대에서 생산돼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 남동부로 운송된 석탄의 양이 10만 여t로 지난해 전체 반출량 10만t을 이미 넘어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음. 훈춘시는 최근 자체 인터넷에 올린 정무공표 자료에서 나진항을 통한 훈춘산 석탄의 운송을 '차항출해(借港出海·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공개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훈춘시는 나진항을 통해 훈춘산 석탄을 상하이, 닝보 등 중국 남동부 지역으로 해상운송하는 방식이 이미 일반화했다고 밝혀 지난해 나진항을 이용해 시험적으로 시작한 석탄 남방운송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했음.
- RFA는 그동안 석탄 수송에 지장을 줄 정도로 열악했던 북한 원정리~나진항 구간 도로의 장애물이 일부 제거돼 나진항을 통한 훈춘산 석탄 남방운송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음. 훈춘시는 작년 1월11일 훈춘산 석탄 1만 7천t을 나진항에서 상하이로 운송한 뒤 연말까지 총 50만t의 석탄을 실어낼 계획이었지만 원정리~나진항 구간 도로공사 탓에 실제 운송량은 목표의 5분의 1 수준인 10만t에 그쳤음.
- 훈춘시는 올해도 나진항을 이용한 석탄 남방운송 목표량을 50만t으로 잡고 있음.

● "北 軍추정 선박, 中어선 나포"(종합)(5/17)

- 북한에 억류 중인 중국 어선 3척은 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나포된 것으로 전해졌음. 17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 가운데 한 척인 랴오단(遼丹) 23528호와 함께 작업하다 도주한 랴오단 23527호 선장 장중귀(姜中國)는 소형 북한 군 선박이 랴오단 23528호에 빠르게 다가가는 장면을 목격했음. 당시 북한 선박에는 푸른색 제복을 입은 사람 4~5명이 타고 있었음. 다른 나포 어선인 랴오단 23979호도 공용 통신망을 통해 "북한군 배에 잡혔다"고 말했다고 주변 해역의 중국 선장들은 증언했음.
- 억류 어민들은 중국의 선주와 통화를 할 때 제복을 입은 총을 지닌 사람들과 사복 차림의 사람이 섞여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중국어를 하는 사람도 섞여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어선을 나포한 북한 기관의 정확한 실체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음. 랴오닝성 공안변방총대는 "현재 (북한과)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만 밝히며 자세한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음.
- 중국 어민들은 북한과의 서해 경계선인 동경 124도를 넘지 않고 줄곧 경계선 서쪽의 중국 해역에서 작업했다고 주장했다. 신경보는 16일 다롄(大連)항에 돌아온 랴오단 23527호의 위성항법장비에 남은 피나포 어선의 항적 사진을 함께 게재했음.
- 어선 선주들에 따르면 북한 측은 거액의 돈을 내지 않으면 배를 팔아버리고 억류된 어민들 또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음. 나포 세력은 애초 한 척당 40만 위안(약 7천380만원)씩, 모두 120만 위안(약 2억2천만 원)을 요



- 구하다가 지금은 90만 위안(약 1억6천500만원)으로 액수를 낮췄음. 선주들은 북한 측이 "돈을 반드시 중국 단둥 어항에 있는 쑹(宋)씨에게 내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선주들에게는 발신 번호가 그 때마다 다른 중국 휴대전화로 "몸값 협상을 하자"는 전화가 오고 있음.
- 북한의 군대나 국가 기관이 정상적으로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한 것이라면 이런 사적 경로의 송금 방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뭔가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 북한 측은 위성전화를 이용해 어민들을 선주들과 연결해주면서도 집요하게 돈만 요구할 뿐 자신들의 소속,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 왜 돈을 내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억류 선원들은 전화를 할 때 북한 측이 시키는 말만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곧바로 폭행을 당해 도무지 현재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선주들은 토로했음.
 - 중국라디오망은 이번 사건이 몸값을 노린 부패한 북한 군인들과 중국 내 범죄조직인 흑사회(黑社會)가 결탁해 벌인 납치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중국 언론 매체들은 나포된 사람들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납치세력'이라고, 나포된 어민들을 '인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16일 이번 사건을 '어업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에 타당한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음.

● <어선 나포, 北·中 '불협화음'>(종합)(5/18)

- 중국 어선 억류 사건을 둘러싸고 '혈맹'에 비유되곤 하는 북한과 중국이 불협화음을 빚는 기미가 역력함. 중국의 가장 큰 불만은 북한이 이번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북한은 자세한 나포 경위는 고사하고 억류 중인 중국 어민들의 신원 자료도 중국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18일 인민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각 채널을 가동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음. 북한 정부는 "중국 어선 한 척이 경계선을 넘어 불법 어로를 하다가 붙잡혔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고 있다"는 수준의 답변만을 내놓았다고 함.
- 어선 3척이 나포된 지난 8일 이후 벌써 열흘이 지났음. 그런데도 억류 어민 숫자조차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북중 양국의 영사 분야 협력이 얼마나 삐걱거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독자 외화벌이' 차원에서 지방의 일부 군인들이 저지른 돌출 행동이어서 북한 중앙 당·정도 정확한 사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함. 실제로 이번 억류 사건에는



-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집행으로 보기에 미심쩍은 구석이 많음.
- 중국 어선을 나포한 세력들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중국의 선주들에게 집요하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음. 처음에는 120만 위안(약 2억2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90만 위안(약 1억6천500만원)으로 다소 낮추는 '용통성'을 보여주기도 했음. 이들은 17일 돌연 270만 위안(약 5억 원)으로 요구액을 올리면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선원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음.
 - 이 돈의 지급 방식을 놓고도 "단둥 어항의 쑹(宋)씨를 찾아가 내라"고 말하는 등 도저히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거듭해왔음.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려는 듯 억류 선박과 선원들을 육지로 데려가지 않고 서해상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억류 선박 선주 가운데 한 명인 쑤차이후이(孫才輝) 씨는 17일 자신의 웨이보(微博·중국식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측이 제공한 위성전화로 선장이 말한 바에 따르면 우리 선원들은 줄곧 몇m² 짜리 선실에 갇혀 지내면서 먹을 것이 떨어져 이틀째 먹지도 못하고 있다" 호소했음.
 - 설사 향후 이 문제가 일반적인 불법 어로 단속 문제로 정리되더라도 북중간에 이견의 소지가 큼. 이번 사건은 북한과 중국의 서해 경계선인 동경 124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났음. 중국 어민들은 어선에 부착된 위성항법장비 자료를 근거로 대면서 자신들이 경계선을 넘어 북한 측 수역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많은 중국 언론 매체들은 북한 선박에 나포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다른 어선의 위성항법장비에 남은 피나포 어선의 항적 자료 사진을 공개했음. 이 사진 속에서 나포된 선박의 항적은 모두 경계선 서쪽에 형성돼 있음. 앞으로 중국이 이런 물증을 들어 불법 조업 사실을 부인하고 나서면 북한은 이를 반박할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됨.
 - 현재 중국 정부는 일단 겉으로는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극도로 절제된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모양새임.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유관 경로를 통해 조선(북한)과 밀접한 소통을 하면서 관련 문제의 조속하고 타당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은 조선에 어민들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밝혔음. 18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홍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하루빨리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만 짧게 언급했음.
 -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인터넷에서는 반복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음. 'Mr_kinG'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시나닷컴 웨이보에서 "조선도 해적질을 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어민들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건 아덴만의 수법이 옮겨온 것"이라고 분개했음.
 - 북한에 어선이 억류된 상태에서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17일 대사관 관계자들을 이끌고 북한 농장을 지원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



고 몸소 이양기까지 몰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티즌은 이를 격양된 목소리로 성토했기도 했음. '思欸'라는 아이디어를 쓰는 네티즌은 "류홍차이는 과연 중국인이란 말인가. 동포가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 北 "일부 中어선·어민 풀어줘"(5/19)

- 중국 어선 3척과 어민 29명이 북한에 억류된 가운데 북한 정부가 "일부 선원과 어민을 풀어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일부 나포 어선과 억류 어민들이 풀려나 돌아갔다고 북한이 통보해왔다"고 밝혔음.
- 중국 대사관은 "북한은 현재 중국 어민들이 안전한 상태로 음식과 건강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대사관은 계속 노력해 이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 대사관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각 채널을 가동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북한은 사건 초기 "중국 어선 한 척이 경계선을 넘어 불법 어로를 하다가 붙잡혔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고 있다" 수준의 답변만을 내놓았음. 어선 3척이 나포된 지난 8일 이후 벌써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북한 정부는 여전히 중국에 나포 어선과 억류 어민 숫자는 물론 이들의 소재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내 선주들은 최근 2-3일간 북한에 억류된 선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들 가운데 실제 일부가 풀려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음.
-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독자 외화벌이' 차원에서 지방의 일부 군인들이 중국의 불법 조직과 결탁해 저지른 돌출 행동이어서 북한 중앙 당·정도 정확한 사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함.

라. 일·북 관계

● 北 송일호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했다"(5/15)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일본인 납치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음. 1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송 대사는 지난 달 16일 북한을 방문한 '북한 여성과 연대하는 일본 부인연락회'의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대표(전 참의원 의원)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를 이미 실시해 약속을 이행했지만 일본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말했음.
- 이는 북한이 2008년 북일 실무자협약에서 약속한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퇴진으로 일본의 정권이 교체되는 바람에 조사 결과의 전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임. 당시 북한은 일본의 정권 교체를 이유로 재조사의 연기를 통보한 바 있음.
- 송 대사는 그러나 재조사의 구체적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그



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 참석차 북한을 찾은 시미즈 대표 등 19명과 평양시내에서 1시간 정도 만났음.

- 송 대사는 북일 관계의 기본 방침과 관련 "일본과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일본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술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해 과거 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평양의 공사장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북한에 남아있다 사망한 일본인 유골이 발견된 것에 대해 "인도적 문제이므로 수습과 참배를 희망하는 사람(일본인)이 있다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음.
- 도쿄신문은 송 대사의 발언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일본에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北·日, 中서 '일본인 유골 반환' 논의(5/17)

- 북한과 일본이 평양에서 발견된 일본인 유골을 반환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17일 보도했음. 민주당의 나카이 히로시(中井浩) 중의원 예산위원장과 가까운 관계자가 이날 중국 동북부를 방문해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와 만날 예정임. 이 관계자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지원해온 대학교수로 지난 3월에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송 대사를 만난 적이 있음.
- 북일 양측은 일본인 유골 반환과 북송 재일조선인의 일본인 처 일시 귀국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나 외무성 직원을 함께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단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송 대사는 지난달 16일 방북한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전 의원에게 평양의 공사장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북한에 남아있다 숨진 일본인 유골이 발견됐다고 "인도적 문제이므로 수습과 참배를 희망할 경우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음.

● "日, 北에 일본인 납치문제 실무협의 요청"(5/19)

- 일본 정부관계자가 북측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즉답을 받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복수의 북일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과 가까운 한 정부관계자는 15~17일 방북한 도쿄도 시부야구 지방의원을 통해 조선대외문화연락회 황호남 국장에게 실무협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음. 이 지방의원은 황 국장과 4차례 만나 "납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측 관계자가) 북한이든 어디든 가겠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황 국장은 "북일 관계를 진심으로 타개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만나겠다"면서도 마쓰바라 담당상이 대북 강경파라고 지적한 뒤 "마쓰바라씨를 포함해 일본 정권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시하겠다"고 말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국장은 또 평양 시내 공사장에서 발견된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진심



- 으로 대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황 국장은 2002년과 2004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에서 통역을 맡았고, 일본 담당으로 알려졌다.

마. 기 타

● 국제적십자, 북한에 270만 그루 묘목 심어(5/16)

- 국제적십자사(IFRC)가 지난 3월부터 두달 동안 북한 평안남북도 등 30여 곳의 산간 지역에 270만여 그루의 묘목을 심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했다. 북한 내 홍수 취약지역에 심은 나무의 수종은 아카시, 잣나무, 소나무, 미루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등으로, 2만여 명의 북한 농민, 자원봉사자들이 묘목 심기에 동원됐음.
- IFRC 베이징사무소는 북한 국가과학원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올해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산간과 나무를 이용하는 '산림 농업'에 대한 특별연수를 관련자들에게 제공했음. IFRC는 올해 나무 심기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최소화되면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음.
- IFRC는 최근 평안남도 신양군에서 '적십자사 나무 심기 사업 기념회'를 열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공군 대규모 연합전투탐색훈련 실시(5/15)

- 한국과 미국 공군은 15일 실전과 유사한 연합 전투탐색구조훈련을 했다고 공군이 밝혔다. 이 훈련에는 한국측에서 F-15K와 KF-16, F-5F 전투기, HH-32·60 헬기, 미국측에서 F-16 전투기와 A-10 폭격기 등 5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했음.
- 특히 박신규 공군작전사령관은 F-5F 전투기에 탑승해 가상 적군(홍군)을, 잔 마크 주아스 미 7공군사령관은 F-15K 전투기에서 아군(청군)을 각각 지휘했음. 박 사령관은 적기 역할을 맡은 KF-16, F-4E, F-5F 전투기와 동급으로 분류되는 북한의 MIG-29·23·21 전투기의 기동 전술을 비롯한 적 무장 운용 전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상 적군을 지휘했음. 주아스 사령관도 최신 무장 운용 전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탐색구조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고 공군은 전했다.
- 연합 전투탐색구조훈련은 적진 한복판에 고립된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한편 한미 공군은 공격편대군 훈련과 방어제공작전, 공중급유훈련 등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 공중종합 연합훈련인 '12-1차 Max Thunder' 훈련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함.



● 제1차 한·미 FTA 공동추 위싱턴서 열려(5/16)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루는 최고 협의기구인 '한미 FTA공동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됐음. 지난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협정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음.
- 공동의장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과 분쟁해결 모범 절차규칙 채택 등 이행 협력 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음.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열릴 예정인 서비스·투자위원회 등 FTA 상 여타 위원회와 작업반 개최 일정 등도 논의 대상임.
-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FTA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협상문 해석을 둘러싼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FTA 관련 기구의 감독권도 갖고 있음.
- 박 본부장은 방미 기간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와 피터슨경제연구소가 각각 주최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해 한·미 FTA 발효의 의미 등에 관해 강연함. 또 한미 양국 기업인들과 별도로 만나 한·미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 박 본부장은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 디아나 태너 오쿤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맥 키니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총장 등과도 면담함.

나. 한·중 관계

● 한중 "북한 GPS교란 문제 대책 강구"(종합)(5/14)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최근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문제를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음.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중·일간 민항기 왕래 등의 안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밝혔음.
-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또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 문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이 긴밀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탈북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키로 했음.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면 이후에는 남북 대화와 북중 대화가 전혀 다른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있어 입장이 명확하다"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반대한다"고 밝혔음.
- 두 정상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부 민감분야에서 신중함과 지혜를 발휘, 한중 FTA가 양국 경제관계를 한 차원 높은 관계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음. 이와 함께 교역·인적교류 등 실질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보·국



방분야에서도 긴밀히 소통·협력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해나가기로 했음.

- 이에 앞서 이 대통령과 후 주석,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의를 열어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와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처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음. 특히 3국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신속하고도 강력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환영했음. 3국 정상은 아울러 3국 간 제반 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확대돼오고 있고, 지역·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음.
- 이밖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한중일 FTA 협상이 연내 개시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한 것을 뜻 깊게 평가했음.

● **중당국자 "韓, 中어민에 무기 쓰지 말아야"(5/14)**

- 중국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가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한국 해양경찰이 중국 어민들에게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음. 외교부 이주사(司, 한국의 국 해당) 뤼자오후이(羅照輝) 사장은 14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중국 어민을 무기를 써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음. 뤼 사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이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써서는 안 된다고 했던 당신의 지난 1월 발언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음.
- 아시아 담당 핵심 당국자인 뤼 사장은 지난 1월 인민일보 인터넷 사이트인 인민망(人民網)이 마련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할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 대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음. 타국의 치안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이 발언은 국내에 전해지면서 격렬한 비판을 불러왔음.
- 뤼 사장의 이날 발언에서는 '무조건'이라는 전제 조건이 빠지기는 했음. 그러나 여전히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자주 하는 자국 어민들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어민들로 묘사하는 등 한국과 현실 인식이 크다는 지적임.
- 뤼 사장은 "어업 분쟁은 하루 이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민들에게 우리의 방식으로 계속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음.

● **중외교부, 김영환 구금 언급 피해(5/15)**

- 중국 외교부가 15일 북한 주체사상의 전도사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변신한 김영환(48) 씨의 구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음.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씨를 비롯한 한국인 4명이 현재 구금돼 있는지, 어떤 죄목이 적용됐는지를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 관련 상황을 알아보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음.



- 김씨 등 한국인 4명은 3월 29일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관련 회의를 하다 체포됐으며 현재 북중 접경인 단둥(丹東)의 한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中, 김영환씨 기소 가능성…장기화할 듯>(종합)(5/16)

- 중국이 한때 한국 대학가의 주체사상 교육 교범이었던 '강철서신'의 작가인 김영환(48) 씨와 관련해 입을 열었음.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유관 부문이 법에 따라 조사, 처리 중"이라고 짧게 언급했음. 홍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김씨 사건에 대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이는 한국의 새누리당을 포함해 각계에서 석방하라는 요구가 들끓자 나온 반응으로 해석됨.
- 김씨와 동료 3명은 지난 3월29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다가 중국 당국의 급습으로 체포돼 단둥(丹東) 소재 국가안전청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 당국은 김씨 체포 후 이틀 만인 지난달 1일 한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간략하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씨는 1980년대 대학가를 휩쓸던 NL(민족민주) 계열 학생운동권의 핵심으로 주체사상 확산의 주역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에 전력을 쏟는 북한 인권운동가로 변신했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반복 인사로 여길만하다는 얘기임. 중국 당국의 김씨 구금, 조사가 길어지는 배경도 김씨의 그런 처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중국이 처리 해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아울러 올해 들어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해왔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김씨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주목할 대목은 중국 당국이 김씨 등에 한국의 국가보안법 격인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통보했다는 점임. 이는 중국 당국이 김씨 등에 대해 단순히 탈북자 지원만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북한 체제 전복을 노린 활동을 했거나 동북 3성 지역에서 불법으로 대북정보를 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임.
- 사실 중국 공안이 수사를 맡는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움. 한중 관계가 결끄럽지 않은 시기에는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지원하다 적발된 한국인에게 이를 적용해 추방이라는 가벼운 조치를 했음.
- 그러나 국가안전부에서 조사하는 국가안전위해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한중 간에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씨 측도 국가안전부 조사 완료후 검찰에 넘겨져 정식으로 기소될 것에 대비해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현재로선 중국 당국이 김씨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행위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김씨 등에 대한 향후 처리 절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음. 아울러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의 주권, 영토, 안보저해, 국가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 제도 파괴행위를 한 개인과 단체에게 적용되지만 조항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김씨 등이 해당 죄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지도 전망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중국 당국이 김씨 등에 대한 처리를 '법대로' 진행한다면 기소와 재판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형량 역시 예상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 아울러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지도체제가 들어서고서 남북한 관계가 더 냉랭해진데다 북핵 6자회담 논의가 '실종된' 상황도 김씨 등에 대한 처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외교가에서는 김씨 등이 체포되고서 50여일이 지나도록 한중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한 정황으로 미뤄볼 때 김씨 사건은 한중 외교마찰로 비화할 '소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그렇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변하거나 한중 지도자들 간에 '결단'이 있으면 이전에 발생했던 탈북자 지원 사건 처리와 마찬가지로 '가벼운' 선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는 않음.

● "김영환씨, 중국내 행적 밝히길 꺼려"(종합)(5/16)

- 중국에 구금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일행은 우리 정부에 자신들의 중국 내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26일 이뤄진 김영환씨와의 영사 면담에서 김씨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부측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언론 노출도 꺼리는 듯 했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김씨와 함께 구금된 나머지 3명은 아예 영사면담 신청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이들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처럼 김씨 일행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근거없는 억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김씨 일행의 안전을 위해서도 억측 보도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중국 측은 김씨 일행의 죄명이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점만 통보했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 현재 김씨 등 4명은 모두 중국 단둥(丹東)의 국가안전청에 기소 전 구금 상태로 있으며, 언제 재판에 회부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들은 또 감호소에 있으며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후문임.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국가안전부(우리의 국가정보원 격)는 국가안전위해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거쳐 최대 7개월을 구금·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특히 우리 정부는 김씨의 변호사를 김씨 부인의 동의를 통해 선임했으나, 중국 측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음. 하지만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것이 맞다"면서 "중국 측 법규정을 보면 김씨 일행이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안전위해죄'는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음.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중국 측에 정확한 법규정과 근거에 대한 문의를 하는 한편 인도주의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변호사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中 베이징서 닷새간 한국 춤 행사 개최(5/16)

-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에서 한국 '춤거장'들의 춤판이 펼쳐졌음. 한국 유일의 춤 자료관인 연낙재와 주중한국대사관 공동 주최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베이징의 여러 대학에서 열린 '동방의 불꽃, 한국의 춤문화'가 무대가 됐음.
- '아름다운 우정, 행복한 동행(美好友宜 幸福同行)'이라는 표어로 중앙민족대학, 베이징 무도대학, 베이징사범대학 등에서 한중 양국의 무용학자와 무용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학술심포지엄, 공연, 최승희 영상감상회, 조선족 무용가와의 간담회가 이어졌음. 먼저 지난 14일 베이징의 중앙민족대학에서 '한중 춤 문화 교류의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 학술 심포지엄이 눈길을 끌었음.
-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장둥(江東) 중국예술연구원 교수가 '중국 당대 춤의 발전과정과 경향성을 논함', 중앙민족대학의 박영광(朴永光) 부학장이 '조선악무문화에 끼친 중국문화의 영향', 베이징 무도대학의 류젠(劉建) 교수가 '무용신체언어 파(波)와 중한 춤 교류의 면(面)'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 한국 측에서도 고승길(高勝吉) 중앙대 명예교수가 '고대 한·중 무용교류 연구', 이병옥(李炳玉) 용인대 교수가 '생태환경에 따른 동서양 무용 비교', 성기숙(成基淑)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중국무용의 근대화와 최승희' 연구 결과를 선보였음. 성기숙 교수는 "한류 열풍의 주인공은 20세기 초반 세계적 무용가로 활약한 최승희"라면서 "1950년대 초 베이징 희극학원에 개설된 최승희 무용연구반이 중국무용의 인재를 양성하고 중국무용의 근대화를 견인했다"고 주장했다.
- 15일과 16일에는 베이징무도대학과 베이징사범대에서 중국 무용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춤 워크숍과 더불어 한국창작춤 안무방법론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음. 여기에서 인간문화재인 이애주 서울대 교수가 전통춤을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춤의 명인인 채상묵 씨가 '승무'의 동작체계를 강의해 호응을 샀음.
- 베이징의 주중한국문화원은 15일 오후 '중국 근대무용의 선구자, 최승희'라는 제목의 영상감상회를 개최했으며 이어 조선족무용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조선족 무용의 위상과 미래' 간담회를 열었음.

다. 한·일 관계

● 한일 문화교류공연 '동행' 국립극장서 열려(5/14)

- 한일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문화교류 공연 '동행'이 오는 16일 오후 8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동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일 양국의 저명한 문화예술가들이 평소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문화 소외계층을 초청해 펼치는 재능 나눔의 문화행사임.
- 14일 문화부에 따르면 한일 문화교류 연작 시리즈 첫 번째 '동행'은 제3기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인 국수호 디딤무용단장과 남궁연 크리에이티브가 기획·연출·섭외·진행을 직접 했음. 공연은 전통문화와 순수예술로 그리는 과거, 피아노 합동연주의 현재, 함께 어우러져 새로움을 창조해가는 미래로 구성했음.
- 일본의 예술가로는 가부키 연주가 다카하시 아키쿠니·다케이 마코토, 안무가 하나야기 키치센오, 일본 신국립극장 발레단의 요네자와 유이·스가노 히데오 등이 참여함. 이들 중 가부키 연주가와 안무가들은 '청명의 보(清明之譜)'라는 제목으로 흰 눈이 덮인 겨울과 소생하는 기쁨의 봄을, 일본 신국립극장 발레단의 무용가들은 '돈키호테 제3막 그랑 파드 되'를 공연함.
- 국내 예술가로는 디딤무용단 국수호 단장과 노해진이 '춘설'을 통해 내적 응집성을 몸으로 연주하는 안무를, 청주시립무용단이 한국 고유의 크고 작은 북을 한자리에 모아 북가락 장단으로 탄생한 '북의 대합주'를 보여줌. 또 국립발레단 이동훈·이은원이 '해적 중 그랑 파드 되'를 선보이며,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무대를 꾸밈.
- 피날레는 한일 합동 무대로 구성되며,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음악 그룹 샹샤 타이퐁과 한국 국악의 민영치가 협력해 무대를 장식함.

● 日, 韓정부 위안부 박물관 예산지원에 생트집(5/18)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가 담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한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것 등을 트집 잡고 나섰음. 18일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주한 일본대사관의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총괄공사는 지난 7일 한국 외교부를 찾아 이달 초 서울에서 문을 연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의 전시 내용이 일본의 입장과 다르다며 항의했음.
-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박물관 내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와 같은 동상이 전시돼 일본 공관의 존엄과 일본 국민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박물관 건립에 5억원을 지원하고 개관 행사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한 것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음.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의 기억과 가르침,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담은 곳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모금활동으로 건립됐으며 일본의 시민단체도 참여했음.
- 한편,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조회장은 17일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을 만나 미국 뉴저지주의 팰리세이즈파크시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의 철거를 팰리세이즈파크시에 요구하라고 촉구했음.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시바 정조회장은 또 위안부 기림비에 "일본 제국 정부의 군에 납치된 위안부로 알려진 여성과 소녀를 위해서..."라고 기술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아 팰리세이즈파크시에 역사적 근거를 요구하라고 압박했음.

라. 미·중 관계

● 中 "천광청 사건은 美의 내정간섭"(5/16)

- 중국이 시각장애 인권운동가인 천광청(陳光誠) 문제로 다시 미국을 직접 겨냥해 비난했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천광청 사건은 (한마디로) 미국의 (중국) 내정 간섭 사건"이라며 "미국이 철저하게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중국에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미국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홍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천광청이 베이징(北京) 소재 미국대사관으로 피신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임. 실제 주중 미 대사관 측은 천광청이 산둥성 자택을 도망쳐 나와 베이징의 지인 집을 전전하고 다닐 때 차량을 보내 천광청을 대사관으로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음. 여기에는 미 국무부의 법률고문인 해럴드 고(한국명 고흥주)와 게리 로크 주중 미 대사가 연루됐다는 얘기도 있음.
- 홍 대변인은 천광청이 이날 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뉴저지) 하원의원에 전화를 걸어 중국 당국이 그의 친인척들을 구금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표시했음. 홍 대변인은 그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법치국가"라면서 "헌법에 따라 중국 국민은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뿐더러 중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음.
- 이는 중국 정부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천광청의 미국 유학을 허가할 것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천광청과 그 가족 역시 중국의 법률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美, 中과 군사 교류 지속 희망(美태평양사령관)(5/18)

- 미국은 중국과 군사 교류를 원만하게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새무엘 라클리어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군 공보국(AFPS)과 인터뷰에서 말했음.



- 라클리어 사령관은 "중국은 떠오르는 세력이고 미국은 성숙한 세력"이라면서 "중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미국이 어떻게 지원하는가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열쇠"라면서 양국 우호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나은 군사 교류가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서로 이해하도록 만들고 "이는 세계 안보 환경에도 좋을 것"이라면서 군사 접촉은 국가간 신뢰를 쌓고 유사시 긴밀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군사적인 관계 개선을 보고 있는데 대해 고무됐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양측이 모든 것 다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상기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불일치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 라클리어 사령관은 미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또 미군은 모든 나라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 바다의 이용을 위해 계속해서 관련 해역을 운항하며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과 중국의 군사 교류는 2010년 1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대량 무기 거래 발표 후 중단됐다 2011년 1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재개됐다. 게이츠 장관은 당시 천빙더(陳炳德) 중국 중앙 군사 위원회 위원 겸 총참모장과 만났으며 4개월 후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의 미국 답방을 이끌어냈다.
 - 량 장관은 9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방문한 중국 국방부 장관으로, 당시 미 정부와 군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간에 쌓인 오해를 풀고 군사적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했다.
- **대만, 美 기뢰제거함 2척 도입(5/18)**
 - 대만이 대중국 해군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으로부터 기뢰 제거함 2척을 도입함. 대만 해군은 오는 7월까지 이들 기뢰 제거함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통신사(CNA)가 18일 전했다.
 - 기뢰 제거함은 오스프리(Osprey)급으로 오는 10월 공식적으로 임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국은 이들 기뢰 제거함이 취역하면 해군의 기뢰 탐색 및 제거 능력을 한 단계 높여 유사시 중국의 기뢰 설치 등을 통한 해상 봉쇄에 대응하는 역량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뢰 제거함은 미군의 군사장비 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 2007년 조기 퇴역한 것으로 1년여간의 수리 및 개조작업을 거쳤다.
 - 대만 측은 해군 요원들을 미국에 보내 장비 조작법 등을 전수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 미·일 관계

- "F35 도입가 올라갈 듯..대당 100억엔 이상"(5/14)



-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차세대전투기 F35의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음. 일본 정부는 애초 F35기의 대당 가격을 99억엔(1천420억원)으로 산정했다가 이를 100억엔 이상으로 올리자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음. 대신 다른 경비를 줄여서 최초 구입분 4대의 조달경비 총액(600억엔)은 유지할 방침임.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달 미국과 정식으로 전투기 매매계약을 체결함.
-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항공자위대의 F4기를 대체할 주력전투기로 F35기 42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음. 이후 미국측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을 올리면 조달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교환했음.
- 하지만 미국 정부는 2013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F35기의 대당 가격(견적액)을 1억5천300만 달러(1천753억원)로 계상하는 등 사실상 가격 인상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였고, 일본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인 셈임.

● "日, 차량 수입절차 간소화 방침..TPPA 美에 양보"(5/20)

-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에 수입 대수가 적은 차종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 간부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수입 대수가 연간 2천대 이하인 차종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입자동차 특별취급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음.
- 미국은 대형차에 불리한 배기량별 자동차 세제나 일본의 차량 안전기준도 일종의 비관세장벽이라며 완화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측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 미·러 관계

● 메드베데프 "美-러 화해정책 변화없을 것"(5/20)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주요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대외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미-러 화해정책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날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18~19일 이틀간 열린 G8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푸틴 대통령 대신 G8 정상회의에 온 것이 러시아 대외정책 불변과 미-러 '리셋(reset:관계재설정)' 정책 지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메드베데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비공식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며 "푸틴 대통령이 조각 때문에 바쁜 외출에 내가 러시아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캠프 데이비드에 온 것을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상당히 오랜 기간 추진했던 리



- 셋 정책의 계승을 보여주는 징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오바마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대통령으로서) 대외정책 수립에 매달려온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나와 푸틴 대통령이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가 여러 형태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 대화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 메드베데프 총리는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요 외교 정책 분야와 양국 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담은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그러나 친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이날 메드베데프의 기자회견 발언은 푸틴 대통령의 G8 정상회의 불참을 미-러 관계 갈등과 연계시켜온 세간의 논란을 잠재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동안 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푸틴이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의 반대를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계획과 러시아 총선과 대선에 대한 미국 측의 비판적 시각 등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G8에 불참한 것이란 해석을 해왔다.
 - 한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하루 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동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 중·일 관계

● 中외교부, 위구르회의 도쿄 개최에 강한 불만 표시(5/14)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서 재외 위구르 조직인 '세계위구르회의(WUC)' 대표대회 개최를 허가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계위구르회의는 테러조직과 연결된 반(反) 중국 조직"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장위구르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며 "일본은 중국의 엄정한 요구를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해 (양국관계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위구르회의의 레비아 카디르 의장에 대해서도 "중국의 분열을 노리는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 세계위구르회의 대표대회는 이날부터 도쿄에서 시작됐다.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와 관련해 13일 열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의 양국 총리회담에서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담에서 두 총리는 양국 간 해묵은 갈등인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은 물론 중국 인권 문제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 〈中日 다시 센카쿠 갈등…정상회담서 충돌〉(종합)(5/14)

-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4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했음.
- 포문은 원자바오 총리가 먼저 열었음. 그는 "(일본이) 중국의 핵심적 이익과 중대한 관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 지사가 지난달 중순 미국 방문 당시 센카쿠를 사들이겠다고 발언하고, 기와무라 다카시 나고야(名古屋) 시장이 난징대학살을 부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동시에 센카쿠가 '중국 땅'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임.
- 원자바오 총리는 재외 위구르 조직인 '세계위구르회의(WUC)' 대표대회가 14일부터 도쿄에서 열리고, 일본 정부가 세계위구르회의의 레비아카디르 의장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음.
-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센카쿠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강조한 뒤 "센카쿠를 포함한 해양에서 중국의 활동이 늘어나 일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맞받았음. 노다 총리는 중국의 인권 문제도 제기했음. 그는 시각 장애인 인권변호사인 천광청(陳光誠) 문제에 언급, "국제적인 기본 가치 또는 보편적 가치의 이해와 추구를 위해 일중 인권대화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했음.
- 일본과 중국은 올해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음. 작년 12월 정상회담에서는 센카쿠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음.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노다-원자바오(신화=연합뉴스)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양국의 외교 관계에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음.
- 중국 측은 일본이 요청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노다 총리의 양자회담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후 주석은 14일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열었지만, 노다 총리는 만나지 않았음.
- 원자바오 총리가 작심하고 센카쿠 문제를 꺼낸 것은 작년 9월 출범한 보수 성향의 노다 정권이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 대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해양 방위력을 증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을 보임.
- 일본은 원자바오의 강경자세에 대해 권력교체기와 보시라이 사태 등을 맞아 중국의 지도층에서 권력투쟁이 진행되면서 영토문제에 대한 강경파의 발언권이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임.
- 아사히신문은 "이시하라 지사의 센카쿠 매입 발언 등으로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파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소비세 문제 등으로 국내 정치에서 흔들리는 노다 정권에 강하게 보이는 편이 정치적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음. 요미우리신문 역시 후진타오 정권이 정권교체를 이룰 올가을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불만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도 영토문제에서 강경자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



인다고 내다봤음.

● 中외교부장, 日 게이단렌 회장과 회담 거부(종합)(5/15)

-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 회장과 예정됐던 회담을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의하면 양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게이단렌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과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이를 취소했음.
- 양 부장의 면담 취소는 일본이 망명 위구르 단체인 '세계위구르회의(WUC)' 대표대회의 개최를 허용하고, 레비아 카디르 의장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앞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13일 한중일 정상회의의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에 항의했고,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노다 총리와의 개별 회담을 거부했음.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세계위구르회의 대표대회 개최를 허가한 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세계위구르회의는 테러조직과 연결된 반(反) 중국 조직"이라고 주장했음. 그는 또 WUC 대표단 일부가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했다며 "WUC의 반중(反中) 분열주의자들은 일본의 우익과 손을 잡았고, 그들이 조국을 분열시키고 중일 관계를 해치길 바란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위구르인을 포함한 중국인은 이들의 미련한 행동을 경멸할 것"이라고 말했음.
- AFP통신과 영국 BBC방송은 레비아 카디르 의장이 14일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음. 이에 대해 WUC는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14일 오후에) 일본 의회 주변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를 교육적인 뜻에서 둘러봤다"고 설명했다.

● 中 "日, 오키노토리 섬 인정주장 근거 없다"(5/16)

- 남태평양의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중국명 충즈냐오(沖之鳥)암초)가 유엔이 인정한 섬이 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중국이 정면으로 반박했음.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충즈냐오암초에 근거해 대륙붕을 확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회가 충즈냐오암초를 섬으로 인정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홍 대변인은 일본이 애초 74만km²의 대륙붕 확장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인정받은 것은 31만km²에 그친다고 지적하면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오키노토리시마를 근거로 확장을 주장했던 25만km²의 대륙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홍 대변인은 "일본이 대륙붕 확장을 신청한 후 중국과 한국은 여러 차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사람이 살기 부적합한 충즈냐오암초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공정, 합리적인 것으로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음.



- 일본 언론들은 최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일본 국토 면적의 약 82%에 해당하는 31만km²의 대륙붕 확장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음. 일본 언론들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고 보고 이의 북방 해역 17만km²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지만 오키노토리시마 남방 해역 25km²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결론을 유보했다고 전했다.

● 中日 해양 협의...센카쿠 공방(5/17)

- 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에서의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해양 협의에서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또 대립했음. 17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과 중국은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16일 첫 실무급 '해양 협의'를 했음. 협의에서 중국 측은 센카쿠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고, 일본 측은 자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영토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 이번 해양 협의는 2010년 센카쿠에서 일본 경비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이후 동중국해에서의 무력 충돌을 피하고, 해난 구조에서 서로 협력하는 등 양국 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었음. 양국은 각자 해양 관련 기관의 역할과 체제, 해양 관련법 등을 소개하고, 향후 교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현안에 대한 깊은 논의는 없었음.
-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과 방위성, 해상보안청 실무자가,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와 국방부, 국가해양국 실무자가 참석했음. 중국은 일본 언론이 요청한 모두 촬영과 협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음. 중국 언론은 현장 취재를 아예 하지 않았음.

● 中, 오키나와 부근 해역서 무인기 훈련(5/17)

- 중국군이 일본 오키나와(沖縄) 부근에 더 많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무인기(UAV·드론)를 동원한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가 밝혔음.
- 1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통합막료감부는 자국 해상자위대가 지난 14일 오전 중국의 054A 다목적 전함 2척과 등다오 232 전자정찰함 1척이 오키나와(沖縄)섬과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 공해상을 지나 태평양에서 동중국해 쪽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음. 이들 군함은 지난달 29일 태평양의 작은 산호섬인 오키노토리 섬 동쪽 700km 해상에서 무인기의 이·착륙 연습을 한 것으로 보도됐음.
- 중국 해군사관학교 리지 대령은 "우리 해군은 훈련할 의무가 있으며 갈 수 있는 모든 해역에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중국의 무인기 기술은 여전히 미국보다 뒤쳐져 있다"면서 "그러나 오키노토리 부근에서 무인기 훈련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이는 우리 무인기 기술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음. 그는 또 이전에 육지와 연안에서 무인기 연습을 했다면서 "공해(公海)는 연안과 기류나 날씨



가 달라 무인기 테스트를 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중국은 지난 200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기를 공개해 세계의 관심을 끌었음.

● 日 "오키노토리 섬으로 인정된 게 맞다" 반론(5/18)

- 일본이 태평양상의 암초인 오키노토리(沖ノ鳥)를 섬으로 인정받았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코이 유타카(横井裕) 외무성 외무보도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를 대륙붕의 기점인 섬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그런 권고를 받은 것이 사실이며,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이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충즈냐오(오키노토리의 중국식 명칭) 암초에 근거해 대륙붕을 확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론을 편 것임.
- 일본 외무성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 자체는 비공개지만, 조만간 권고의 요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요지가 발표되면 일본측의 설명이 올바르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日나고야 시장 "난징학살 사실인지 토론해보자"(5/20)

-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중국민의 공분을 샀던 가와무라 다카시 일본 나고야(名古屋) 시장이 이번에는 "중일 양국이 자유토론으로 난징대학살의 진상을 조사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 20일 중국 국제라디오방송의 인터넷 뉴스사이트인 국제재선(國際在線)에 따르면 가와무라 시장은 전날 나고야 시가 주관하는 공개토론회에서 난징대학살에 대한 '소신'을 재차 언급했음. 가와무라 시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중고교 교과서 일부가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며) 일본군이 두달 동안에 수십만 명의 비무장 민간인 등을 학살하고 난징 시내 주택 3분의 1을 불태웠다고 기술한 것으로 안다"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인은 중국인에게 어떻게 사죄해도 부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없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자유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 내에서는 가와무라 시장의 이 발언이 기본적으로 난징대학살의 진상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음. 가와무라 시장은 지난 2월 20일 나고야 시를 방문한 중국 공산당 난징(南京)시 당 위원회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일전쟁 외증인 1937년 난징에서 통상적인 전투행위는 있었으나 학살은 없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발언해 문제가 됐음. 이로 인해 난징시는 나고야시와의 교류를 즉각 중단했고 두 도시 간 체육행사를 포함한 민간 교류도 사실상 끊겼음.
- 아울러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가와무라 시장의 난징대학살 부정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개인' 의견이라면서 소극적



으로 대응해왔음.

- 베이징 외교가는 가와무라 시장의 난징대학살 발언이 '세계위구르회의(WUC)'의 도쿄 개최와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 등으로 근래 중일 양국 갈등이 깊어지는 속에서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음. 특히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14일 베이징(北京)에서의 중일 총리회담에서 지난 2월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의 난징대학살 부정 발언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中 귀보송, 방일 재차 연기"(5/20)

- 중국 군부 실력자인 귀보송(郭伯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일본 방문을 미루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음. 귀보송 부주석은 24일부터 방일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를 미루겠다고 일본측에 알려왔음.
-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나 14~17일 도쿄에서 세계 위구르 회의를 개최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으로 풀이됨.
- 귀보송 부주석은 애초 4월 중순에 일본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북한의 로켓 발사 시기와 겹쳐 일정을 뒤로 미뤘음.

아. 기 타

● 한중일 공동선언문 채택.. "FTA 작업 즉시 착수"(5/14)

- 한중일 3국은 14일 연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 및 실무 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키로 했음.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음.
- 공동선언문은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경제·통상 협력 심화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사회적,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서 소통 및 공조 강화 등의 분야에 50개 항목으로 이뤄졌음. 이들은 투자보장협정서명을 환영하고, 가까운 시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각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음.
- 3국 정상은 또 역내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통화교환협정을 골자로 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의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이어 한중일 정상은 상호신뢰, 호혜 및 공동발전 등을 토대로 3국간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음.
- 3국 정상은 또 재난구호, 원자력 안전, 지진 공동연구 분야 협력에 주목하는 동시에 해적, 에너지·사이버 안보, 전염병,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관한 3국간 협력 증진을 장려했음.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역할에도 공감을 표했음.



- 한편, 한중일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나 앞으로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에 대한 규탄을 포함한 한반도 조항의 포함 여부를 장시간 논의한 끝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음.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와 크게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외교적인 민감성 때문에 3국 공동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 中 "한반도서 새 위기 격화 막아야"(종합)(5/14)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4일 "한반도에서 새 위기가 격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3일 베이징(北京)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까닭을 묻는 말에 답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음.
- 그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관련된 각 측의 이익에 관련되며 번영과 발전의 전제가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각 측은 유관 방면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중시해야 하고 대화와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각 측은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하는 한편 냉정함을 유지해 현재 정세를 완화하고 다시 대화의 궤도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도 3국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관련국이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고 인내심을 유지해가면서 갈등 완화를 위해 선의를 보이고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음. 원 총리는 그러면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계속해가야 한다"고 요구했음.
- 대변인 정례브리핑에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 설명회에 나선 뤼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아주사(司·국) 사장은 공동선언문 포함 여부를 떠나 한반도 문제가 정상회의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로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뤼 사장은 "3국 지도자가 토론한 모든 의제를 선언문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모두 알 것"이라며 "문건에서 이 문제를 언급 안 했다는 것이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뤼 사장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3국 지도자들은 양자, 삼자 회담에서 모두 상당 시간을 들여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중국 지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견해와 한국의 우려를 매우 자세하게 경청했고, 일본의 견의와 고려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뤼 사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6자회담 및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은 관련국 모두의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며 "중국은 현재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냉정을 유지하면서 모순의 격화를 막아야 한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 뤼 사장은 또한 영양(식량) 지원과 핵 프로그램, 미사일 발사 중지를 맞교환했던 미국과 북한 간의 2·29합의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계속 대화를 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음.



● <美의회 '전술핵 재배치' 거론.. 현실화 가능성은>(5/14)

-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내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음. 우선 21년만에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될 것인지가 관심을 끄.
- 결론적으로 볼때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지난해초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로버트 쟈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음.
- 또 이번 논의를 촉발시킨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 무기 재배치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 표결(32대26)시 민주당 의원들은 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반대입장임.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수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큼.
- 여기에 한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 또한 확고함.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13일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이 소식통은 "미국은 1991년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고 상당량을 이미 폐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이 정책을 뒤집으려면 많은 논란이 따를 것"이라며 "현 상황으로는 (재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외교 전문가들은 오히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배경을 주목함. 미국내 보수성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공화당이 북한 핵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흐름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임.
- 게다가 최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내 견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한반도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공화당 강경파가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음.
- 그러나 만일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음. 그럴 경우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물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해온 6자회담의 지속 여부 등 복잡하게 따져야할 사안이 한둘이 아님.
- 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카드로 '전술핵'이 나온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음. 한국 정부는 현재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에 묶여 있는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 美정부 "한반도 전술핵 불필요"(5/15)

-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무기 재배치 방안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음.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 가결 처리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



- 의에 "우리의 정책은 '핵없는 한반도(non-nuclear Korean peninsular)'를 지지한다는 것으로, 이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전술핵무기는 한국의 방어에 불필요하다"면서 "이를 한국에 재배치할 계획이나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 이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한국 내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가(不可)'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됨.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기존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군(軍) 당국도 지난 13일 이와 관련,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이에 앞서 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음.
 - 한편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안마 방문에 대해 "버마(미안마의 다른 이름)가 한국 등 지역 파트너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대화·접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평가했음.

● 中매체들, 韓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우려(5/15)

- 중국 언론매체들이 15일 한반도 전술핵 무기 재배치 논의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음. 미국이 1991년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시킨 전술핵을 다시 들여놓게 되면 남북한 간 핵대치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걱정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1면 머릿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할지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압력이라고 보도했음.
- 이 매체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 내용이 담긴 '2013 국방수권법' 논의를 계기로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로인해 한국에서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미 공화당이 전면에서 나서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환구시보는 관련 논란에 대해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제어하려는(以華制朝) 전략이라고 분석했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으로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중국을 자극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가 배어있다는 해석임.
- 이 매체는 또 북한 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반도 전술핵무기 논란이 벌어지면서 동북아에 '핵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우려도 내놨음. 그러면서 북핵문제 해결은 동북아 안전에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면서 그 이유는 중일 간에는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한일 간에는 독도 다툼이 상존하는 등 분쟁거리가 산적한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 중국 국영(CC)TV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을 보도하면서 이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음. 인민일보도 미국 언론매체들의 한반도 전술핵 논란 관련 보도를 인용하면서 우려를 표시했음. 인민일보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발효됐다고 상기 시키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이와는 모순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대만, 中 겨냥 '스텔스함' 12척 건조 계획(5/15)

- 대만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해 신형 '스텔스' 코르벳함 건조 계획을 밝혔음. 대만 해군의 추수밍 대령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이 500t급 스텔스 코르벳함 12척을 건조할 계획이라면서, 국내 조선소와 3천10만 달러에 첫 번째 함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 그는 첫 번째 함정이 오는 2014년 인도될 예정이며, 이를 시험 운항해 보고 나서 나머지 11척의 생산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함정은 사거리가 300km인 초음속 옹풍(雄風)2와 3형 함대함 미사일 16기를 장착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앞서 대만 국방부 린위야오(林於豹) 차장(차관)도 지난해 5월 중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함 개발에 착수해 2014년 건조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음. 린위야오 차장은 특히 이 함정에 탑재한 함대함 미사일이 중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다면, 이 '항모 킬러'가 중국과 주권 분쟁을 벌이는 난사(南沙)군도, 동사(東沙)군도까지 항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 日정부 "사이버 공격에 자위권 발동 가능"(5/15)

- 일본 외무성이 외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엔헌장 등 현행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정리해 지난달 26일 열린 정보보안정책회의에 제시했음.
- 유엔헌장은 타국의 무력공격 시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가맹국이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외무성의 견해는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으로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임.
- 당시 비공개로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보보안정책회의에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을 비롯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했음. 겐바 외무상은 "모든 검토 결과 사이버 공간에서도 기존의 국제법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국가에 대해 자위권 발동뿐 아니라, 공격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와 배상 청구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임. 방위성은 이런 국제법상의 해석을 전제로 타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바이러스 등 '사이버 무기' 개발에 이미 착수했음.

- 하지만, 현행 일본 국내법으로는 사이버 공격을 '무력공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확실치 않아 향후 국내법 해석에 대한 검토를 서두르기로 했음.

● **日-호주 정보보호협정 체결...안보협력 강화(5/17)**

- 일본과 호주는 17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군사기밀 등의 공유를 확대하는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음.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상과 봄 카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만나 이처럼 민감한 정보의 교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음. 이 협정에 따라 겐바 외상은 일본이 호주와의 양자 간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공동 맹방인 미국과 3자 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카 외무장관도 정보보호협정에 사인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 협정이 양국의 전략동반자 관계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일보'라고 평가했음. 일본과 호주는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상호 제공하는 민감한 자료의 기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취했음.
- 일본 관리들에 따르면 일본 측에선 외무성과 방위성, 경찰청을 비롯한 5개 부처의 정보가 정보보호협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관리는 일본과 호주가 올해 말께 열릴 전망인 차기 외무-국방 장관 회담(2+2)에서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 등 자세한 사항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일본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프랑스에 이어 호주가 네 번째임.
- 겐바 외상과 카 장관은 첫 대면한 회담에서 또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타결과 2010년 6월 이래 열리지 않는 양국 외무-국방 장관 회담을 이룬 시일에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음.
- 지난 3월 취임한 이래 처음 방일한 카 장관은 겐바 외상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른 현안에 관해서도 논의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